

광주시, 621억 투입 '포용·공존 문화도시' 조성

문화다양성위, 3대 전략 85개 과제 시행계획 확정 비엔날레 중심 문화협력... 세계적 문화도시 도약

광주시가 시민 일상 속 공존 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자산 기반의 미래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621억원 규모의 문화다양성 정책 85개 과제를 추진하며 '포용·공존의 문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6년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열고, 올해 문화다양성 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문화다양성법'과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수립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과 연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올해 총 621억원을 투입해 3대 전략, 85개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 간 공존(45개 과제),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25개 과제), 지속가능한 문화

다양성 생태계 기반 조성(20개 과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시민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상호 존중의 공존 기반을 다진다. 문화다양성 주간과 세계인의 날 행사를 확대해 내·외국인 주민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어·점자 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전일빌딩245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인생활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해 세대와 계층간 문화소통을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고려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교육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다양성의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과 광주다운 역사 인물 선양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영화 제작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문화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해 포용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문화자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콘텐츠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도 확대해 문화 접근성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국제 문화행사와 세계적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 미술전람회 등 국제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광주의 문화 위상을 높인다. 또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아시아문화기관교류협의회를 통해 예술가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시설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지원해 지역 문화 거점 기능도 강화한다.

김영문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다양성은 도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가치"라며 "85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나주·보성·담양 등 6개 시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선정

전남 지역 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복지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서 나주시·보성군·담양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시군과 지역 우체국이 협력해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집배원이 월 2회 정도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한다.

방문 시 점검표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위급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군에 전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사업에는 장흥군·강진군·해남군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정됐고, 나주시·보성군·담양군이 신규로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6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통합 상생토크 최근 담양군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담양군 상생토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철원 담양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최대 124만원 지원 소득 제한 없이 신청... 3개월 집중치료·3개월 사후관리

광주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서 거주한 난임 부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

(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양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3개월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방치료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후 3개월 동안

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과 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0년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뒤 난임 진단서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시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시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 치료는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경제진흥원, '주 4.5일제' 시범 운영 월~목요일 근무시간 확대·금요일 단축 근무 방식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성희)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실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확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로, 유연근무제 유형 중 근무시간 선택형을 활용해 월~목요일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금요일을 단축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 40시간 근무체계는 유지하며 임금과 복무체계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무시간을 재설계해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근무시간(Core Time)을 설정하고, 대직자 지정과 부서별 필수 인력 비율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대응 부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근무 인원을 유지하도록 해도 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진원은 최근 3년간 노사 협의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이사회,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직원 이직률은 지난 2023년 12.5%에서 2024년 9.3%, 2025년에는 0%를 기록했다.

전남경진원은 이러한 조직 안정 흐름을 이어가면서 근무제도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성희 원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으로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근무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olbul@

도, 18일까지 생활수준·복지 등 사회조사

전남도가 오는 18일까지 지역 1만 9116개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전남도 사회조사'를 진행한다.

사회조사는 도민의 생활수준, 사회적 인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총 11개 부문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으로 구성됐다. 도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문제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전방주시·벨트착용

